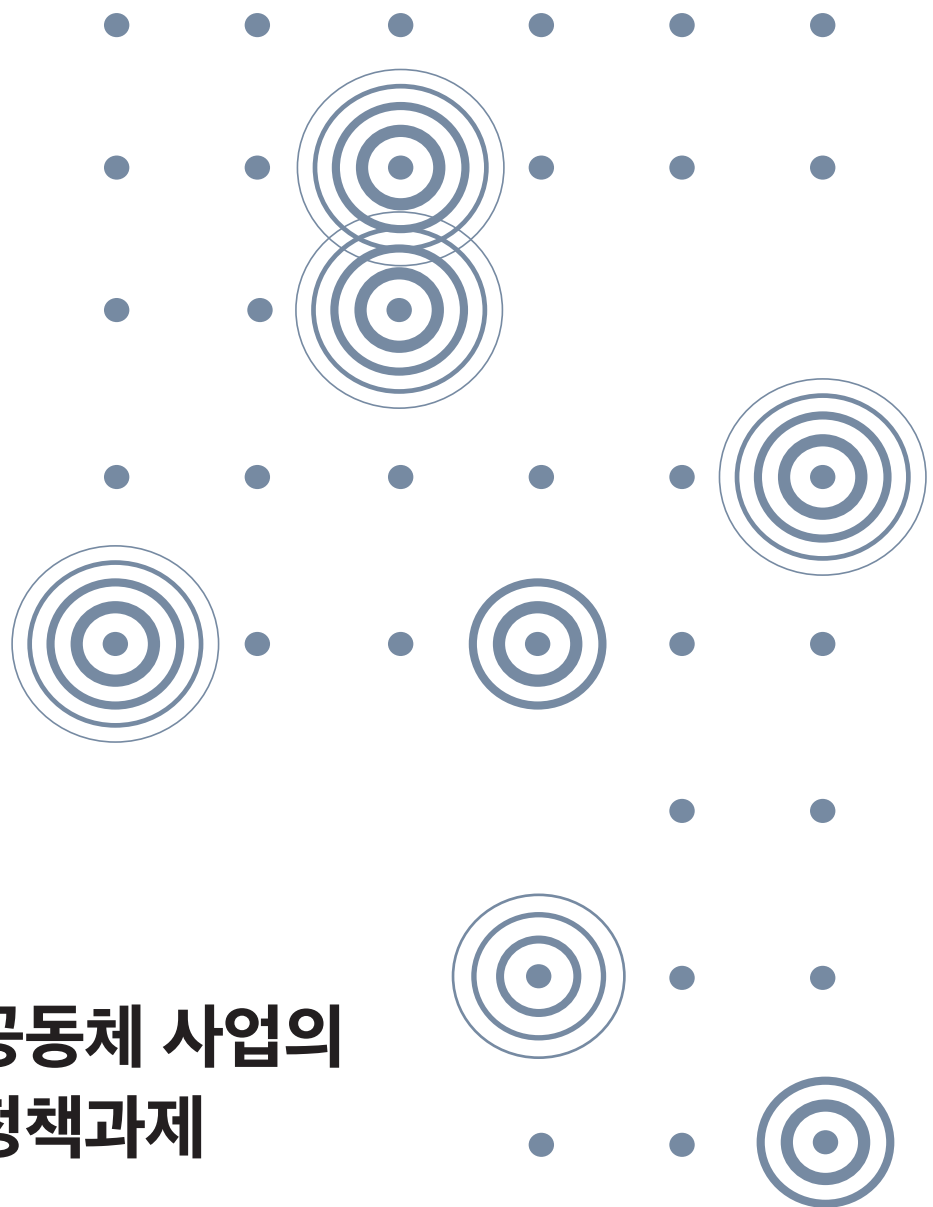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안현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아영

서울연구원
연구원

조윤정

서울연구원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268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19년 1월 28일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와 「서울시 공동체공간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안현찬 부연구위원
02-2149-1269
hyunchan@si.re.kr

구아영 연구원
archiang527@gmail.com

조윤정 연구원
02-2149-1138
choyj@si.re.kr

요약	3
Ⅰ.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현황	4
Ⅱ.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과제	7
Ⅲ. 정책제언	14

요약

서울시는 2012년부터 주민들의 이웃 관계망 회복과 생활의제의 호혜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 사업부서들과 25개 자치구가 각자 추진하는 여러 단위사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업의 집행과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통합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약 5천 건의 마을공동체 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목표의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민선 7기 마을공동체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을공동체 사업, 서울시 주관 아래 초기 단계인 모임형성 지원사업 위주 진행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5년 기준 서울시 11개 사업부서와 25개 자치구가 추진하는 5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단위사업은 지원 목적과 보조금 규모에 따라 모임형성 지원부터 종합적 마을계획 수립 지원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2015년까지 지원한 사업은 총 4,987건이고, 이 중 63.9%가 작고 쉬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이었다.

사업참여자·공동체공간·지원체계 확대되는 성과 있었지만, 개선도 필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는 2015년까지 최소 12.8만 명으로 정책 수요가 많은 여성, 30~40대, 중산층의 참여는 활발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 중년 남성 등의 참여는 저조했다. 공동체공간은 2016년까지 331곳의 조성을 지원했고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높았지만, 자립성이 낮아 운영유지율이 4년차에 69.1%까지 줄었다. 지원체계는 정책 출범 초기에 비교적 빠르게 완비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지원 만족도가 50점대 초반에 머물렀고, 자치구별 사업 추진결과와 차이가 커서 획일적인 지원체계를 탈피할 필요가 있었다.

소극 참여층 유입, 공동체공간 성장지원, 자치구별 정책 다양화 등 1기 정책 한계 보완해야

지금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이 저변 확대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장과 다양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시민 접촉면을 넓혀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를 확대하는 전략은 지속하되, 소극 참여층의 욕구와 생활의제에 특화된 유입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공동체공간 지원은 신규 조성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 등의 전략을 활용해 기존 공간의 자립성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년부터 자치구가 마을공동체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자치구별 통합 공모사업과 중간지원조직 인력 확대도 일률적인 기준을 따르기보다 기존 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차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I.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현황

I 서울시·자치구, 4년간 마을공동체 사업 약 5천 건 지원

서울시 11개 사업부서와 25개 자치구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중

-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도입하고 자치구로 확산
 - 서울시는 주민들의 이웃 관계망 회복과 생활의제의 호혜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정책을 시행
 - 주민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2~2015년 정책 예산의 48.3%¹⁾가 소요된 가장 대표적인 지원책
 - 2013년 이후에는 서울시가 도입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준용해서 자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가 점차 확대
 - 2015년 현재 서울시 11개 사업부서, 25개 자치구가 총 56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
- 서울시와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체계와 데이터 부재
 - 56개 단위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부서별로 사업 추진, 관리, 점검이 분리
 -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 결과보고서 등 원자료를 등록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지만 입력률이 낮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 단위사업도 다수 존재
 - 이 때문에 2015년까지 지원한 총 4,987건의 마을공동체 사업결과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한 적이 없는 실정
- 4년간의 사업 원자료를 바탕으로 1기(2012~2017) 마을공동체 정책의 종합평가 시도
 - 2012~2015년²⁾ 4년간 마을공동체 사업 원자료를 담당부서가 직접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통합적인 추진결과 분석과 평가를 최초로 시도

1) 총괄부서인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예산 기준으로 다른 사업부서 예산은 제외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12~2017년을 1기로 규정하는데, 이 정책리포트는 근거자료인 2종의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범위가 각각 2015년, 2016년까지여서 시간적 범위가 1기 정책과 일부 차이가 있음

저변 확대 위한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 가장 많고, 단계 높아질수록 지원 건수 줄어들어

- 56개 단위사업을 지원 목적과 보조금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분류
 - 단위사업의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따른 유형화가 필요
 -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2)의 마을공동체 형성 단계와 2014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략적 재구성³⁾을 종합하여 5단계로 구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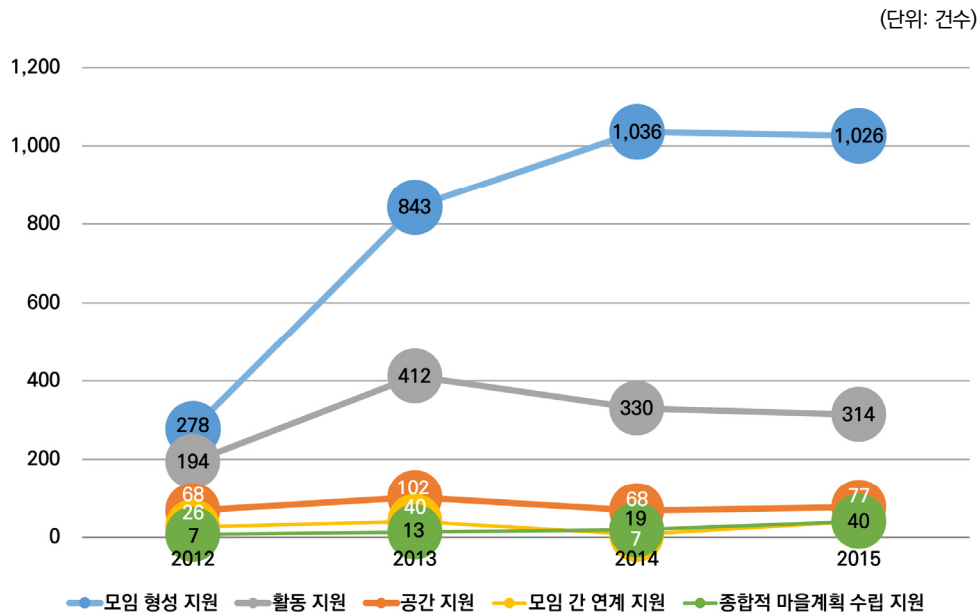
[표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단계별 분류

단계	세부내용	해당 단위사업 예시	보조금 규모 (백만 원/년)
1단계 모임형성 지원	소규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이웃만들기 부모커뮤니티 마을미디어(체험형) 마을과 학교(모임지원형) 자치구 자체 사업	1~6
2단계 활동 지원	육아, 문화, 미디어 등 주제별 활동 지원	우리마을활동지원 아파트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매체형) 다문화마을공동체	6~50
3단계 공간 지원	공동체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우리마을공간지원 마을예술창작소 마을기업(서울시) 마을미디어(거점형)	25~100
4단계 모임 간 연계 지원	사업 참여 주민과 모임 간 교류로 지역 단위 네트워크 형성 지원	우리마을프로젝트(2유형) 마을연계망	5~7
5단계 종합적 마을계획 수립 지원	성숙한 마을공동체의 중장기적인 진단 과 발전방안 수립 지원	동네단위 마을계획 마을과 학교(상생형) 에너지자립마을 안전마을(통합형)	15~280

-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이 63.9%로 가장 많아
 -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가 단위사업을 재정비하고 자치구 자체사업이 도입된 2013년 부터 매년 1,000건 이상을 지원
 - 단계별로는 모임형성 지원 단계가 63.9%로 가장 많은데, 소규모 활동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저변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 결과

3) 유창복, 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서울, p.66.

- 사업 수준이 높고 보조금 액수가 많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지원 건수는 자연히 감소
-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활동 지원과 공간 지원 단계 사업의 지원 건수가 계속 감소한 것은 원인 파악이 필요
-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으로 참여자가 늘더라도 더 다양하고 높은 욕구에 부응하는 상위 단계 사업이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활동의 지속과 성장이 어렵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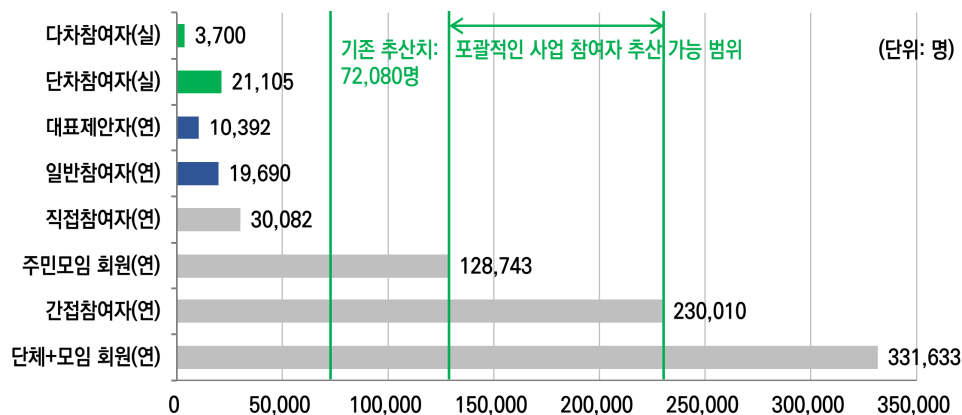
[그림 1] 2012~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단계별 지원 건수

II.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과제

I 사업참여자 최소 12.8만 명, 적극 참여층은 여성·30~40대

사업참여자 2015년까지 최소 12.8만 명으로 마을공동체 저변 넓어져

- 서울시 1기(2012~2017) 마을공동체 정책의 핵심 목표는 ‘저변 확대’
 - 2012년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에 82개 마을과 240여 개의 팽아적 활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마을공동체가 아직 미약한 초기 단계로 진단
 - 직접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효용과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
- 2012~2015년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 최소 12.8만 명으로 조사
 - 4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는 최소 128,743명에서 최대 230,010명으로 집계⁴⁾
 - 2012년에 전취 마을공동체를 경험한 시민이 크게 늘었지만, 서울 인구 전체 대비 1.3%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새로운 참여자의 등장은 계속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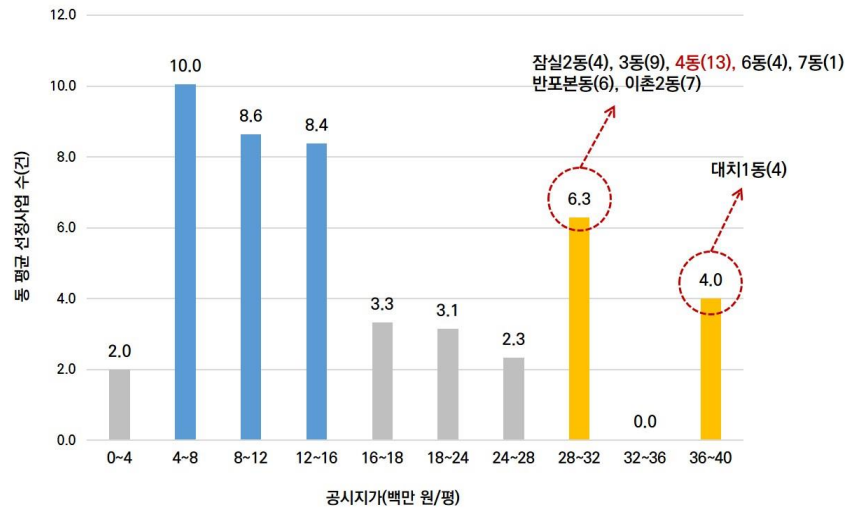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집계기준별 참여자 수⁵⁾

4) 최소값은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주민모임 회원 수, 최대값은 사업 결과보고서의 최종 참여자 수가 집계기준

5) 그래프 왼쪽의 (실)은 실인원, (연)은 누적 인원 수를 의미하는 연인원의 줄임말

마을공동체 사업 적극 참여층 여성·30~40대·중산층

- 여성이 사업참여자 중 73%, 대표제안자 중 76%를 차지
 -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10대 과제에 “여성의 활동과 역량 강화”를 채택함으로써 여성의 참여 확대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
 - 성별 정보가 있는 사업참여자 22,889명 중 여성 비율은 73%
 - 참여자를 대표해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제안자도 여성이 76%를 차지해, 여성 참여는 양적으로 많은 동시에 질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확인
- 30~40대는 참여가 활발한 반면, 20대 이하는 저조
 -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10대 과제에 “청년과 노인의 참여 확대”를 포함해 특정 연령대가 소외되지 않는 폭넓은 참여를 지향
 - 나이 정보가 있는 사업참여자 11,294명 중 30~40대는 59%, 50~60대는 29%, 20대 이하는 9%를 차지
 - 서울 인구의 연령대 비율과 비교하면 30~40대는 24% 이상 높게, 50~60대는 비슷하게, 20대 이하는 23% 정도 낮게 참여
 - 30~40대에는 동네에서 일상을 보내며 육아·안전 등 생활의제가 있는 젊은 기혼여성이 많은 반면, 20대 이하는 동네와 일상이 동떨어져 있어 사업 참여 동기가 약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
-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평당 공시지가가 400만~800만 원인 지역에서 사업이 가장 활발
 - 마을공동체 사업이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참여자가 특정 소득계층에 편중되어 있는지 점검은 필요
 - 공간 단위 소득 자료 취득이 어려워 2016년 주거용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가격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평균 건수의 관련성을 행정동 단위로 분석
 - 마을공동체 사업 건수는 평균 공시지가 400만~800만 원/평(10.0건), 800만~1,200만 원/평(8.6건), 1,200만~1,600만 원/평(8.4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
 - 더 낮거나 높은 곳들은 평균 사업 건수가 3건 내외로 감소
 - 2,800만~3,200만 원/평(6.3건), 3,600만~4,000만 원/평(4.0건)인 곳도 사업 건수가 많은 편
 - 이 지역은 잠실, 반포 등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육아, 돌봄, 아파트 공동생활 등을 주제로 사업에 참여한 30~40대 젊은 부부가 많았기 때문
 - 따라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중산층 거주지로 간주할 만한 지역의 거주자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보다 활발하게 참여한 것으로 추정



[그림 3] 행정동 평균 주택 공시지가별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 건수

사업 참여 횟수 늘수록 더 어려운 역할·사업 많이 맡는 등 주민의 질적 성장 이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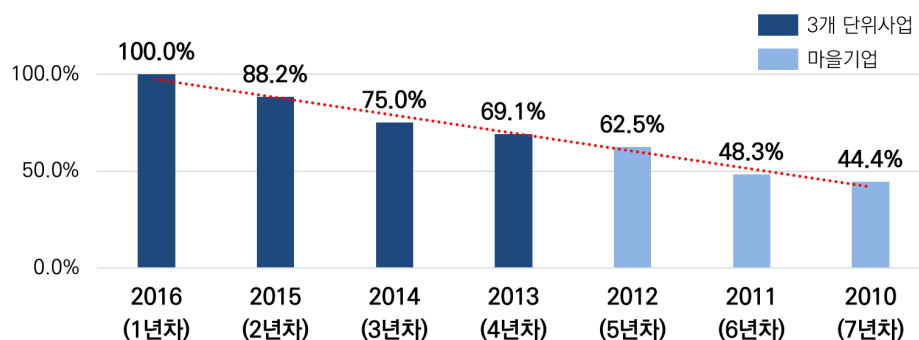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 지속층인 다차참여자가 3,700명 확인
 - 다차참여자는 여러 해에 걸쳐 여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활동 지속층으로, 사업 이력을 살펴보면 참여자의 질적 성장 확인이 가능
 - 2015년까지 다차참여자는 총 3,700명, 최다 참여 횟수는 10건으로 확인
 - 다차참여자의 첫 참여 사업은 79.6%가 모임형성 지원 단계로,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해 활동을 지속하거나 승격하는 성장 지원 전략이 유효했다고 평가
- 다차참여자의 73.2%는 첫 사업을 한 해 더 지속한 연속참여자
 - 다차참여자를 참여 횟수에 따라 연속참여자(2건), 적극참여자(3~4건), 주민리더(5건 이상)로 구분
 - 연속참여자는 첫 참여 사업에 한 해 더 연속 지원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다차참여자의 73.2%를 차지
 - 적극참여자는 첫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에도 참여해 활동이 확대된 참여자로 다차참여자의 23.0%를 차지
 - 주민리더는 본인 주도 활동이 여러 개이거나, 주변 모임의 활동에 동참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리더 또는 활동가로 성장한 주민으로 다차참여자의 3.8%를 차지
-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대표제안자, 높은 단계 사업 더 많이 맡아
 - 대표제안자 비율은 주민리더(59.6%), 적극참여자(52.9%), 연속참여자(44.7%) 순으로 높아,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대표제안자를 더 많이 맡는 것으로 확인

- 3단계(공간 지원) 이상 사업의 참여자 비율도 주민리더(22.7%), 적극참여자(17.3%), 연속 참여자(9.8%) 순으로 높아,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더 어려운 사업에 많이 참여
-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주체의 성장으로 이어졌음을 의미

I 공동체공간 331곳 조성 지원, 자립성 강화 노력·지원 필요

마을공동체 공간 331곳 조성 지원했지만, 연차별 운영유지율 점차 낮아져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물리적 거점인 공동체공간 331곳의 조성을 지원
 - 공동체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가치와 실천을 확산하는 물리적 거점
 -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10대 과제에 “현장밀착형 마을인프라 구축”을 채택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공동체공간을 직접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2012~2016년 우리마을공간지원, 마을예술창작소, 마을기업 등 3개 사업으로 주민주도 공동체공간 331곳의 조성을 지원
- 운영비 지원 부족, 수익 불안정으로 연차가 늘어날수록 운영유지율 낮아져
 -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은 시설조성비와 사업비에 집중되어 있어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는 전적으로 주민이 부담
 - 일반 상업시설이 아닌 공동체공간은 운영비를 충당할 만큼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지 못해 적자이거나 문을 닫는 곳들이 발생
 - 연차별 운영유지율(2017년 기준)은 2년차 88.2%에서 6년차 48.3%까지 감소



[그림 4] 서울시 공동체공간의 연차별 운영유지율(2017년 기준)

공동체공간 자율성·공공성 높지만, 자립성 낮아⁶⁾

- 운영의 민주성, 회원들의 주인의식 등 공간 운영의 자율성이 높은 편
 - 평균 유급운영자 2.19명과 자원활동 회원 13.9명이 협력해서 공간을 운영
 - 공동체공간의 71.6%가 운영위원회에서 공간 운영을 논의하고 결정
 - 회원들의 주인의식(80.9%), 책임감(76.4%), 운영참여 의사(58.0%)가 높은 편
- 공동체공간을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 증가라는 공공성을 달성
 - 공동체공간의 92%가 공간을 외부에 개방하고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대관
 - 공간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이웃 관계가 양적(77.1%), 질적(68.8%)으로 증가
 - 지역사회 활동(75.8%)과 애착심(79.5%)이 증가한 회원도 다수 존재
- 자립성이 낮은 원인은 사업수익, 회비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
 - 민간 소유 건물을 월세 임대한 공동체공간이 64.9%, 이 중 40.6%가 지하 또는 3층 이상 등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입주
 - 연평균 수입 5,414만 원에서 보조금의 비중은 34.5%이고, 마을기업을 제외하면 사업수익과 회비는 각각 20%대에 불과
 - 연평균 지출 5,000만 원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비중은 각각 38.9%와 34.0%인데, 수입 중 보조금은 사업비로 거의 집행되므로 사업수익과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 적자가 발생
 - 재정상태가 적자인 곳은 표면상 13.7%였지만,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는 48.6%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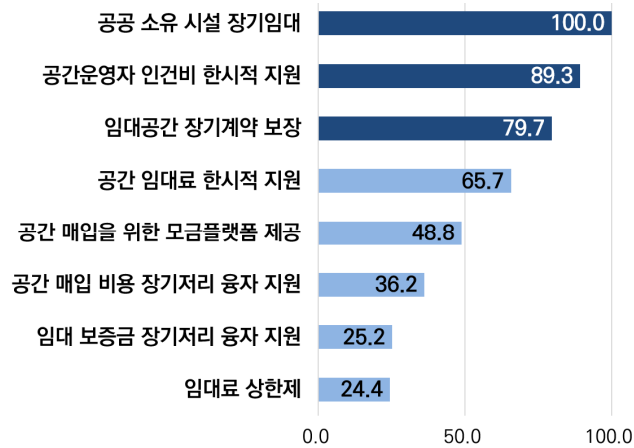
운영개선 자구노력 활발하고, 경상비용 경감 지원책 요구 많아

- 공동체 공간의 76.4%가 자구 노력 중이고, 회원들의 지불가능 의사도 높은 편
 - 공동체공간의 76.4%가 운영개선 계획을 세웠거나 실행 중
 - 공간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회원들은 1인당 평균 출자금으로 96.8만 원, 회비 또는 지출로 월 5.6만 원, 노동시간으로 월 12.5시간을 쓸 수 있다고 응답
- 공간 매입을 위한 금융지원보다 임대료와 인건비 경감 지원을 더 선호
 -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책은 공공소유 시설 장기임대(100.0점), 공간운영자 인건비 한시적 지원(89.3점), 장기계약 보장(79.7점) 순으로 선호⁷⁾

6)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74개 공동체공간 운영자 면담조사, 293명의 회원 및 운영자 설문조사 시행

7) 운영자와 회원 288명이 1~3순위로 복수 응답한 결과를 '선택자 수 X 순위' 가중치(1순위 X 3, 2순위 X 2, 3순위 X 1)로 합산한 후 최고점수를 얻은 항목을 100점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에 점수를 부여

- 공간 매입을 위한 모금플랫폼 제공(48.8점), 공간 매입 비용 장기저리융자(36.2점) 등 최근 이슈인 지역자산화 관련 지원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편



[그림 5] 서울시 공동체공간 운영자의 지원정책 선호도

I 자치구별 추진결과 차이가 커,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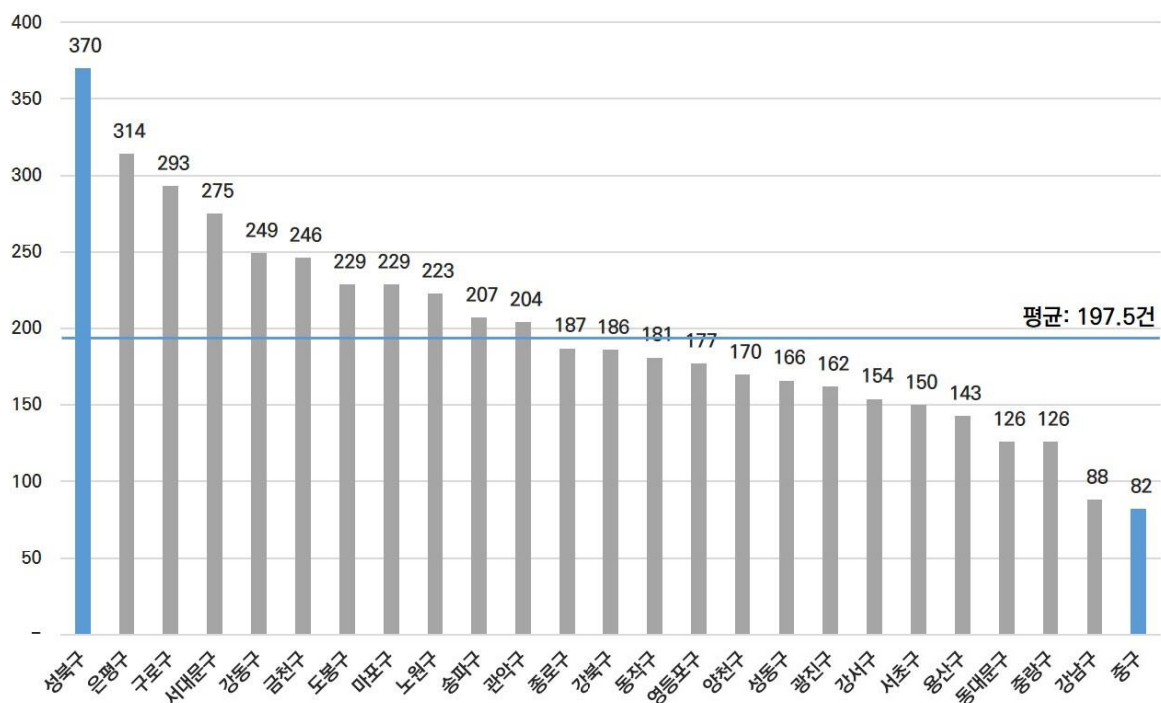
종합적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갖췄지만 주민친화적 운영 미흡

- 서울시 차원의 종합 지원체계와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설립 완료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정책을 시작한 2012년에 지원조례 제정(2월), 담당부서인 마을공동체담당관 신설(3월),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8월) 설립 완료
 - 2013년부터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지원해서 2017년 현재 자치구 직영형 3곳, 민간위탁형 7곳, 민간단체 협력형 14곳 등 총 24개 자치구에 설립 완료
-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지원 만족도는 54.0점 이하
 - 2017년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에 관한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각각 52.2점, 54.0점으로 낮은 편⁸⁾
 - 지원 만족도가 낮은 원인은 투입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판단
 - 2012~2016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예산 637억 원 중에서 홍보·교육·컨설팅 등 간접 지원은 5.7%,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등 기반조성은 25.3%에 불과
 - 자치구 마을부서 직원 수는 평균 5.68명,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상근자는 평균 2.6명에 불과 (2017년 말 기준)

8)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사업결과 차이 고려해 차별화된 지원체계 갖춰야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서울시 사업과 예산을 자치구로 이관해서, 자치구별 상황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 이에 따라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상근자를 최대 5명까지 늘리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의 특성 차이가 큰 편
- 마을공동체 사업 건수는 성북구가 370건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82건으로 가장 적어 최대 4.5배 차이
- 주소 정보가 있는 사업참여자 30,082명 중 은평구 거주자는 2,571명이지만, 용산구 거주자는 296명으로 최대 8.7배 차이
- 전문성이 높은 컨설팅과 지원이 필요한 대표제안자 수는 은평구가 785명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가 139명으로 가장 적어 최대 5.6배 차이
- 따라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인력 확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 지원 대상인 사업참여자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자치구별로 다양화할 필요



[그림 6] 2012~2015년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사업 건수 비교

Ⅲ. 정책제언

Ⅰ 저변 확대 중심 1기 정책의 한계점 보완에 집중

소극 참여층 유입, 공동체공간 성장 지원, 자치구별 정책 다양화 노력 필요

- 마을공동체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참여자 확충과 다양화 전략 도입
 -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 확대를 지속하면서, 소극 참여층 유입을 유도하는 특화 전략 도입
- 공동체공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강화
 - 공동체공간의 자립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인건비, 공공 유희 공간 장기임대 등 다양한 직접지원 제공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기획 지원
 - 자치구가 기존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통합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중간지원조직 인력 규모와 전문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개선
 - 상시적인 데이터 취합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마을공동체 사업 DB를 개선하고, 공동체공간 이용과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사업참여자 확대 전략 지속과 다양화 전략 도입	-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 지속과 시민 대상 교육 강화 - 소극적 참여집단 유입을 위한 마이크로 타겟팅 도입
공동체공간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강화	- 단기 사업계획을 장기 종합계획으로 확대·수립 지원 - 인건비, 공공 유희공간 장기임대 등 직접지원 다양화
자치구 특성 반영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기획 지원	- 기존 사업 추진결과를 반영한 통합 공모사업 기획 권장 - 사업참여자 규모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인력 구성 차별화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개선	- 상시적인 데이터 취합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마을공동체 사업 DB 개선 - 공동체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I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 확대 전략 지속하고 다양화 전략 도입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 지속과 시민 대상 교육 강화

- 작고 쉬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 지속
 - 서울시 전체 시민 대비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 비율은 1.3% 수준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 모임형성 지원 단계의 사업은 지속 추진이 필요
 - 소극 참여층과의 접촉면 확대를 위해 서울시보다 자치구와 행정동 단위의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 교육 연계형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
- 일반 시민 대상 교육 강화로 마을공동체 정책 공감대 제고
 - 마을공동체 사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소극 참여층, 일반 시민 대상 교육 강화
 - 직장인, 대학생 등 지역 기반이 약한 집단을 위한 ‘찾아가는 교양강좌’ 운영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 등 기존 시민 대상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소극적 참여집단 유입 유도하는 마이크로 타겟팅(micro-targeting) 도입

- 적극참여자를 활용한 유입 전략 도입
 - 30~40대 기혼여성의 공동육아, 마을밥상 활동에 배우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 컨설팅, 교육 등의 간접지원을 제공
 -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의 가족과 지인도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별 행사, 네트워크파티, 마을총회 등을 기획하고 추진
- 소극적 참여집단의 사회·공간적 정보를 활용한 전략사업 개발
 - 1인 여성가구를 위한 안전한 동네 만들기 사업, 중년 남성의 은퇴 후 지역사회 정착을 준비하는 커뮤니티 갭이어(gap-year) 프로그램 등 특화사업 개발

I 공동체공간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강화

정책 방향을 조성 지원에서 성장 지원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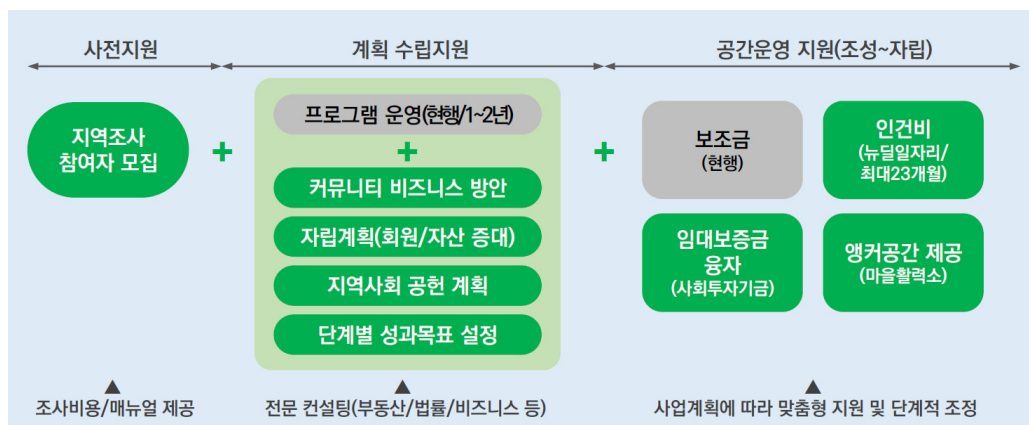
- 공동체공간의 자립 운영 기반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 지원
 - 주민주도 공동체공간의 자립성은 자율성과 공공성의 성과가 자산과 수입으로 이어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
 - 신규 지원은 제안서 심사 단계에서, 연속 지원은 컨설팅 단계에서 해당 공동체공간에 맞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도록 지원
- 단기 사업계획을 장기 종합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 수립 지원
 - 현행 공동체공간 사업 제안서는 1~2년 동안의 사업계획 위주로 작성
 - 앞으로는 5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 지역조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안, 지역사회 공헌 및 자립 계획, 연차별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확대
 - 주민이 요청하면 사업 신청 이전 단계부터 관련 전문가들이 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컨설팅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강화

공동체공간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다양한 자원 지원

- 인건비, 공공 유희공간 장기임대 등 직접지원 다양화
 - 현행 직접지원은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지원 항목이 시설조성비, 사업비 위주로 제한되어 공동체공간의 실제 수요와 괴리가 큰 것이 문제
 -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기준 개선, 외부 공적자원 도입 등을 바탕으로 공동체공간의 상황과 요구에 적합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
 - 인건비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연계하면 공동체공간 운영자에게 월 최대 171만 원을 23개월까지 지원 가능
 - 임대보증금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연계하면 상환계획 심사를 거쳐 이자율 3% 이내로 저리 융자 가능
 - 영국 지역주권법의 'Community Asset Transfer'⁹⁾를 참고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소유한 공공시설을 목록화하고, 공동체공간 운영계획에 따라 장기임대하는 방안도 도입 가능

9) 지역주권법 제정을 주도한 영국 지역단체 연합인 로컬리티(Localities)에 따르면, Community Asset Transfer는 사회경제환경적 편익을 얻기 위해 지방정부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공공자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지역사회 단체(개발신탁, 사회적기업, 공동체이익회사 등)에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이전하는 제도임. 자산 이전 방안은 다양한데, 대부분 매우 낮은 임대료로 25년 이상 장기 임차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전(자료: <https://mycommunity.org.uk/take-action/land-and-building-assets/community-asset-transfer/>)

- 사업부서 간 협력, 외부 전문가 공동 풀 운영 등으로 간접지원 자원 공유
 - 현재는 공동제공공간 지원사업별로 사업 컨설팅, 외부 전문가 풀 운영, 현장 모니터링 등이 분리되어 있어 간접지원을 공유하는 상호보완 효과 부족
 - 사업계획 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면 사전 지역조사와 장기 종합계획 수립 컨설팅의 절차와 자원을 공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더 적합한 사업으로 이관도 가능
 - 사업별 중간지원조직이 자체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케팅, 자산관리 등의 분야는 외부 전문가 풀을 공동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7] 공동제공공간 지원사업의 종합 개선방안

I 자치구 특성 반영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기획 지원

기존 사업 추진결과 반영한 통합 공모사업 기획 권장

-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 주제별 공모사업 구성 비율을 설정
 - 2017년부터는 자치구가 자체 사업과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을 바탕으로 통합 공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해서 추진
 - 서울시는 자치구가 통합 공모사업을 기획할 때 기존 사업 추진결과를 반영해 단계별, 주제별 사업 구성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장
 - 사업 건수와 참여자가 적은 자치구는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과 간접지원을 적극 추진해 저변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 건수와 참여자가 많은 자치구는 모임형성 지원 단계에 해당하는 자체 사업보다 서울시가 주로 추진했던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단계 사업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적절

사업참여자 규모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인력 구성 차별화

- 기존 사업참여자 특성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인력 규모와 전문성을 차등화
 - 현재까지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사업 건수와 참여자 수 차이를 감안하면,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인력 증원은 다양성에 입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간접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기존 사업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인력 확대 규모를 차등 설정
 - 높은 수준의 컨설팅과 지원이 필요한 기존 대표제안자와 다차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인력의 전문성과 직급을 차등 구성

I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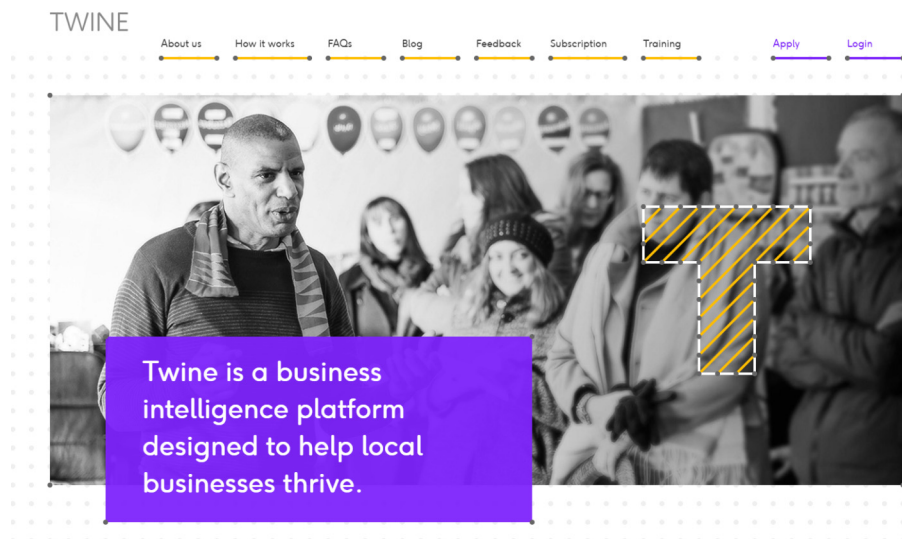
상시적인 데이터 취합·활용 가능하도록 마을공동체 사업 DB 개선

- 서울시와 자치구 통합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구축
 -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 DB 시스템은 원자료 등록률과 분석 활용도가 낮으므로, 상시 정책 점검과 개선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
 -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총괄부서인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서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자료가 생성되는 시점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
 - 특히 자치구 차원의 입력과 확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편의성을 높여 마을공동체 사업 DB를 자치구 자율 운영에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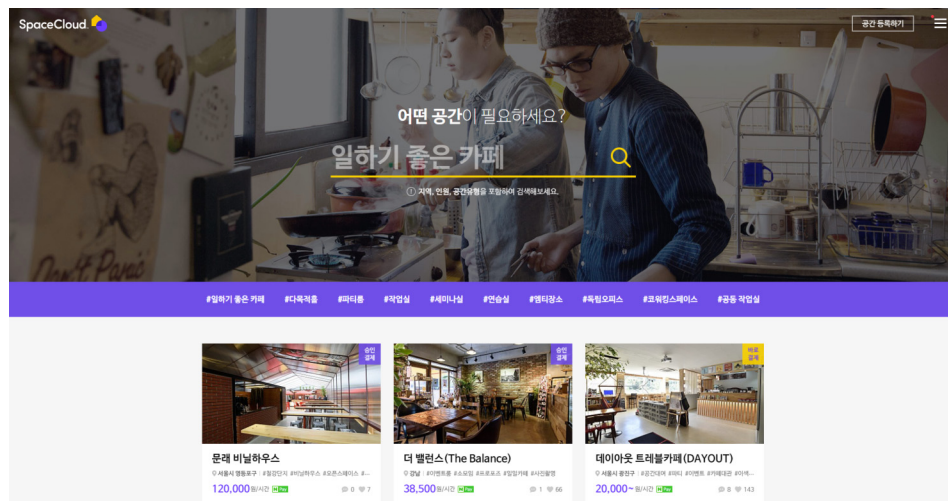
공동체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공동체공간 운영자, 이용자, 지원자를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 현재는 공동체공간의 운영과 이용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공간 운영자들이 각자 구축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크고 이용 편의성이 낮은 실정
 - 영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리 플랫폼 ‘Twine’, 국내 최대 민간 공유공간 플랫폼인 ‘Space Cloud’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가 공동체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것을 제안

- 공간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여러 공동체공간의 정보 검색, 프로그램 신청, 대관 예약과 결제, 자원활동 신청(회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 공간 운영자는 공간 및 프로그램 홍보, 회원과 이용자 관리, 회계 및 보조금 정산, 출자금과 회비 등 자산관리를 수월하게 처리해서 실무 부담 완화
- 이를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해지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별로 중복 시행하는 현장 모니터링도 축소 또는 효율화 가능



[그림 8] Twine 홈페이지(<http://www.twine-together.com>)



[그림 9] 스페이스 클라우드 홈페이지(<https://spacecloud.kr>)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